

관리 사각지대 '자토바이' 불법 개조 '주의보'

〈자전거+오토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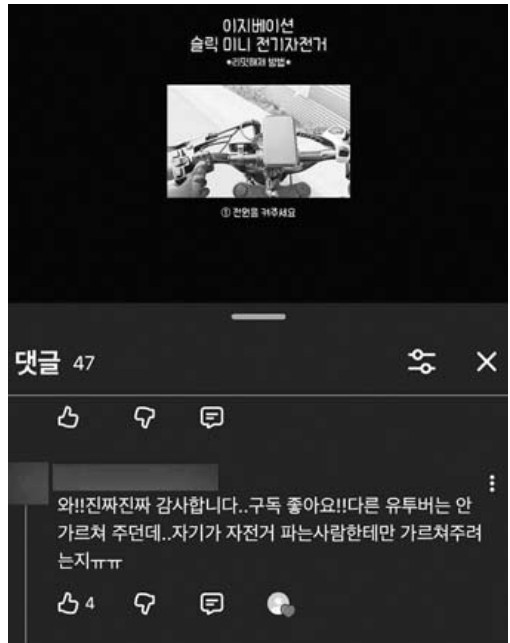
최고 속도·페달 보조 등 종류 상이 저속을 특성 탓 운행 인지 어려워 사고 위험 ↑...속도 해제 영상 버젓 "외관상 식별 난항...법 준수" 당부



6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골목 곳곳에는 자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이를 타고 다니며 골목길을 누비는 이들도 다수였는데, 전기 동력이 더해진 덕에 속도는 일반 자전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문제는 빠른 속도 탓에 충돌 사고 시 부상 위험이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달리 배기가 등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보행

자가 미리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 이창준(30대)씨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도 전기차처럼 소리가 거의 나질 않아 빠르게 지나간 후에야 혼잣말로 '저게 자토바이구나'한다"며 "대부분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난 후 도망이라도 간다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중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와 페달 보조 방식(PAS·Pedal Assist System)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다. 그러나 페달이 있어도 가속 레버를 조작해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페달 자체가 없는 것들과 시속 25km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이륜차)로 분류되며 번호판 등

특과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면허와 번호판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유튜브 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되면서 불법 자토바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한 속도 해제는 엄연한 불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조에 성공했다는 인증까지 버젓이 등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다른데, 걸로 봤을 때 알 수가 없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불법 개조 여부 역시 외관상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 속도를 둔 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모두를 위해서 소유자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찬용 기자



유튜브 한 채널에 게시된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해제 영상에서 실제 개조에 성공했다는 댓글.



'뜨거운 불꽃' 만큼 집중 6일 오후 광주기능경기대회가 열린 북구 매곡동 광주공업고등학교 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숙련 기술인들의 경연장인 이번 대회는 총 33개 직종 280명의 선수가 참가해 오는 10일까지 11개 경기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조영권 기자

매장 공금 1천만원대 횡령 30대 항소심서 감형

'허위 배달원' 만들어 대금 지급 허위 배달원 계정에 대행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장 공금을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

은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6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매장에서 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장에서 배달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

해 채권자 명의로 허위 배달원 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이 계정에 일일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는 캐시를 보내는 방법으로 빚을 갚아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형 불복을 주장한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재영 기자

세월호-5·18 잇는 '평화걷기' 열린다

5·18기념재단·광주교사노조 등 연대 11일 전남대 정문·광주시청서 출발 각 5·9km...도착지는 민주광장 동일

세월호 참사와 5·18민주화운동을 함께 기리며 연대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평화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9시 '2026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걷기'가 전남대학교 정문과 광주시청에서 각각 시작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교사노동조합,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과 함께 추진하는 연대 행사로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시민 실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는 걷기 코스는 총 5km다. 광주시청 코스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출발해 광주천을 따라 총 9km며 걷기와 달리기로 분리해서 운영된다. 두 코스의 출발지는 다르지만, 도착지는 광주동구 5·18민주광장으로 같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행사 당일 출발지로 집결하면 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416m, 416km, 518m, 518km 등의 의미를 담은 거리를 선택해 걸거나 달린 뒤 활동 사진과 소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THE MAY' 문구가

담긴 달리기 양말과 안전 휘슬 키링 등 기념품이 제공되며, 걷기 과정에서는 SNS 인증 활동과 기부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기념재단은 학급 단위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와 연대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평화걷기는 5·18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5·18 사적지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공간을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출소 10일 만에 또...차탈이 30대 구속 출소 10일 만에 차탈이 범죄를 또 저지른 30대 구속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를 받은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북구 일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 4일 광산구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이번 범행은 동종 전과로 형을 살다 출소한 지 10일 만에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찬용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어청
상품등록: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